

공공부문 조직발전에 대하여

정 윤 광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지도위원)

1. 조직발전이 필요한 이유

1) 97년 임투의 중심축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가. 97년 공공부문 임투의 체제를 구축한다.

94년 11월 공노대가 결성된 이후, 95, 96년 2년간의 임투에서 공노대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쟁취하였다. 96년에는 공동파업을 내건 공공 5사의 선봉적 투쟁을 비롯한 공노대의 공동투쟁으로 임금가이드라인을 돌파, 두 자리수 임금인상 쟁취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해고자 복직을 실현하고, 조직개편, 전임자 축소, 민영화 등 정부의 경영혁신공세를 어느 정도 저지해 내었다.

이것은 공노대의 조직적 위력을 재삼 확인케 해 준 투쟁 성과이다. 공노대 건설 이전에는 공공부문의 어느 연맹도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다.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등의 대규모 노조들도 단독의 싸움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다. 이는 온전히 공노대의 활동과 투쟁의 성과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장기간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온갖 정책적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익을 억압해 온 정부가, 공노대의 요구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후퇴한 결과이기도 하다.

97년의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주지하다시피 97년은 대통령선거의 해이며, 현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최대 목표로 모든 정책을 이에 끼워 맞추려 할 것이다. 한편, 9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불황은 97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기 현정권의 사회·노동정책의 핵심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반대세력을 제거·약화시키고, 경제불황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김으로써 비용 감축,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경제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의지는 이미 96년 하반기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가중과 임금 동결, 대량해고의 형태로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며 노동운동을 압박해 오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개악은 그에 대한 가장 집약된 표현이다.

97년 상반기에도 정부는 임금동결정책과 함께 탄압을 가중시킬 것이다. 96년 수준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다 확대되고, 집중·체계화된 조직적 투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공노대 소속 전체 노조가 통일적인 임투계획을 가지고 시기집중·공동집회·공동쟁의발생신고 등 공동투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정투노련, 전문노련, 한국통신, 지하철, 전국의보, 조폐공사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노조, 방송사노조, 금융부문노조, 한전기공노조, 그 외 공노대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노조가 합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이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함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부문의 조직 투쟁력은 막강해 질 것이다. 이러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금년에 갖지 못한 대정부 교섭력(적어도 비공식 교섭력이라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97년 전체 임투의 중심축을 구축함으로써 총노동전선을 형성한다.

공공부문은 지난 3년간 전체 임투의 중심축을 이루어 왔다. 94년 전지협 총파업투쟁, 95년 한국통신투쟁, 95년 공노대 공동투쟁이 그것이다. 현재의 노동정세로 보아서 97년에도 공공부문이 임투의 중심축을 세우지 않으면 총노동전선의 구축은 어려울 것이다. 공노대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다. 96년 임투는 6월 하순 투쟁집중기에 공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연맹이 연합하는 형태로 임투의 정점이 형성되었고, 전문노련, 병원연맹, 민주금속연맹, 현총련 소속의 사업장들이 이에 가세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노동층의 전체 전선은 취약하였고 총노동전선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97년에는 보다 완고한 정부의 탄압과 임금동결정책에 맞서서 이를 돌파해 내려면 총노동전선이 계획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심축은 공공부문의 축만으로는 안된다. 97년에는 또한 자동차·금속·현총련이 통합금속조직으로써 또 하나의 임투의 중심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97년 임투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97년에는 공공부문과 통합금속조직,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총노동전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총노동전선 구축의 일차적 목표는 정권과 자본의 임금동결정책을 타파하여 승리를 쟁취하는데 있다. 그러나 총노동전선의 구축은 단순히 임금동결정책 타파를 통한 임투승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노동전선의 구축을 통해서 노동운동은 노동법개정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대중투쟁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쟁을 통한 조직의 강화 발전이다. 공공(서비스)부문의 조직발전도 통합금속의 조직발전도 이 투쟁과 체계적으로 결합·배치·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발전시킨다.

공노대는 96년 상반기 임투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조직적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내었다. 시기집중과 쟁발신고, 파업찬반 투표와 파업예고 등 파업전술까지 공동으로 구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 투쟁을 수행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의 요구와 통일적인 교섭 투쟁전술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5사 노조의 과오가 아니라 공노대의 조직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다 투쟁적인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간의 괴리감도 컸다. 공노대 전체의 역량을 최대한 통일시켜 내지 못했던 것이다. 공동투쟁은 일회적 투쟁에 그쳤고, 계획적 사업의 일부로 배치되거나 조직발전전망과 체계적으로 결합된 것도 아니었다. 공노대는 현재의 대표자회의 수준으로는 97년 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키 어렵다. 전체 공노대 소속 노조를 통일적으로 묶어 내어, 강력한 투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섭력을 확보, 임투승리를 쟁취하려면 보다 진보된 조직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획기적으로 강화된 지도력과 집행력을 갖추고 보다 완성된 대의기구와 정책, 교육, 선전 등 체계적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대중의 의사·의지를 결집하고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공노대는 지난 2년간의 활동과 투쟁, 금년 상반기의 공투를 통해서 97년 임투를 수행할 보다 발전된 강력한 조직을 세워 낼 수 있다. 또 이를 세워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강화 발전된 조직으로 임투승리를 쟁취해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쟁은 조직발전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투쟁을 통해서 대중의 공감대가 강화되고 동의가 획득되어 조직발전의 성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투쟁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부문의 조직을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조직적·투쟁적 중심을 세워 내야 한다.

2) 일시적 투쟁력을 향상적 힘과 교섭력으로 전환한다.

상반기 공동임투 승리후 공노대는 하반기에 힘있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각 단위는 개별화되어 각자의 과제에 매몰되었다. 그러나 정권

과 자본의 공세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특히 투쟁사업장 노조에 탄압이 집중되어 각개 격파를 기도하고 있다. 한국통신, 조폐공사,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산지하철, 신용보증기금, 전력기술, 토지공사, 그 외 수많은 노조들이 탄압과 공세에 직면해 있다. 공노대가 현재의 조직적 수준과 인식으로 이러한 탄압을 저지해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상반기 공투 승리의 힘을 항상적으로 보유하려면 보다 발전 강화된 조직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회의체의 느슨한 조직, 5사노조 연대와 같은 일시적 공동전선 만으로서는 이러한 정권의 전면적이고 항상적인 공세를 저지할 수 없다. 소속 대중의 힘을 결집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체계만이 이러한 항상적이고 체계적인 정권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다. 조합원의 힘과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존재할 때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 투쟁사업장을 지원·지도하고, 보유하고 있는 조직·투쟁력에 바탕한 교섭력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치 않고서도 각 조직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투쟁과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힘을 동원, 사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공부문 공동의 전략적 과제를 수행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그 과제는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노동계 공통의 일반적인 노동관계법 사항 외에도 특히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거나 제약하는 노동관계법, 공기업의 운영을 왜곡하는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비롯한 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각종 특별법, 공기업임금가이드라인 정책, 조직개편과 민영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경영합리화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공공 각 부문을 혁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적인 개혁과제 등이 그것이다. 일회적인 투쟁만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조사·연구로 노동자적

관점에 선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수행함으로써만이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강력한 조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대기업 노조나 소규모 연맹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공(서비스)부문의 강력한 조직이 설 때, 철도, 담배인삼, 체신 등의 노조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민주적 노조진영으로 통합해 내는 작업, 또한 각 사업장 내부의 노동자들의 주체적 투쟁과 강력한 공공부문 조직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부문의 강력한 조직이 주요한 축을 구성하는 총노동전선의 엄호 속에서 버스·택시·화물·항공 등의 열악한 또는 미성숙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운수부문의 민주화와 조직화사업도 크게 촉진될 것이다. 노동자학교 설치와 운영 등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도 비로소 힘있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운동의 산별 재편 촉진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과제인 산별 재편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최근 MBC단일노조의 결성, 대학노련, 병원노련의 산별재편, 금속자동차현총련의 통합 논의등 산별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앙조직의 통일된 방침이 부재하고, 지도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속에서 산별체제 전환의 종합적 전망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기업별노조체제 선호와 각 조직의 기득권 논리 및 조합원들의 자사이기주의적 태도 등 산별체제 구축을 어렵게 할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조직발전은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타 부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산별 재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느 방향 어떤 형태로 재편될 것인지는 주객관적 정세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해당 노조들이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느냐가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97년도 임투는 전체 민주노조 운동 진영이 총전선을 펴되, 산별 전환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공동 임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조직발전사업의 원칙

1) 노동운동의 역사성에 기초한다.

조직형태를 사고함에 있어서, 흔히 자본이 만들어낸 산업 분류나, 5.16 군사정권이 만들어 낸 어용노총식의 산업별 분류, 또는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무시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직발전은 노동운동의 역사성에 기초하면서 그 역사성에 의하여 형성된 제 조건들을 목적의식적으로 활용·조직·배치해 나가는 투쟁 과정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

87년 대투쟁 이후 우리의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을 보자.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굴욕과 압제의 역사를 벗어 던지기 시작한 우리 노동운동은, 전국의 각 지역과 산업·업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들이 모여서 지역연합(협의회)을 결성하고, 다시 전국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한편 신규 업종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단결의 발전속에서 업종연맹회의를 결성하였고, 재벌그룹 소속의 대규모 노조들이 모여서 그룹노조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 전노협과 업종회의, 그룹노조연합 등이 모여서 전노대를 거쳐서 민주노조의 전국 총연합조직인 민주노총을 결성하였다.

한편으로 87년 이전 청계피복노조, 서울제화공노조, 남부금속노조 등 영세 업종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한 지역업종노조가, 87년 이후 과기노조, 전국의보노조, 강사노조 등 전국 규모의 업종·소산별노조 결성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전국병원노조, 방송노조, 대학노조 등의 산별노조 건설로 발전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노련과 한국노총 소속 보험노련이 사무금융노련으로 통합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건설노련과 일용건설노협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까지 산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동운동의 2대 당면 과제로 일컬어 왔다. 그러나 96년 임투와 노개투를 겪으면서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조직적 투쟁적 중심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더욱 우선적인 과제임이 드러났다. 조직적 투쟁적 중심은 현재의 우리 노동운동 역사와 현실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통합금속연맹 건설과 공공(서비스)연맹 건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투쟁의 중심축은 금속산업과 공공부문 조직이 되어 왔다. 금속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주력이었고, 이후 89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과 마창, 그리고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적인 투쟁, 90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의 투쟁, 91년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투쟁도 금속이 주축이었다. 93년 현총련투쟁이 임투전선의 중심축을 형성한 이후 투쟁의 집중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금년 공노대 투쟁과 결합한 자동차연맹의 투쟁으로 되살아났다. 단일한 금속연맹 건설문제는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다. 자동차연맹·민주금속·현총련을 중심으로 20만의 금속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결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아직 형식만 갖춘 민주노조운동의 강력한 조직적 투쟁적 중심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한국 노동운동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을 형성해 왔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에서 서울지하철 노조는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수년간 노동운동의 전선을 담당해 온 전노협의 조직적 투쟁적 중심의 하나를 형성해 왔다. 또, 88년 철도파업을 비롯하여, 89년 서울지하철파업, 89년 이후 전면화된 전교조의 강인한 투쟁, 90년 KBS·MBC파업,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전문노련의 끈기있는 투쟁 등은 노동자 투쟁의 중심적 부분을 형성하였다. 최근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면 속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 94년

철도 및 지하철파업과 95년 한국통신의 투쟁에 이어서 96년 공노대 공동투쟁 등, 최근 3년간의 공공부문 투쟁은 임투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인 투쟁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노대라는 공동투쟁의 틀을 구성하여 2년간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의 실질적 무력화등 커다란 성과를 획득하였다. 15~20만의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지형을 바꾸어 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조직적 투쟁적 중심으로 등장할 것이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 또한 크게 증대할 것이다.

2) 노동자대중의 의지에 바탕을 두고 노동자대중의 권익을 위한다.

공노대 2년간의 활동 및 투쟁의 성과로 중요한 것은 공노대에 속한 노동자대중이 공노대로 더욱 단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주체와 대상, 투쟁의 과제에서 명확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단위노조나 연맹으로는 불가능한 대단결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획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공부문 노동자대중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서와 의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더욱 굳건하고 크게 단결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단결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대중의 의지를 기초로 해서, 이를 통해서 획득될 노동자대중의 권익을 위해서 공공부문노조 조직발전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가치들은 작은 것이 될 것이다. 간부들은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대중의 의지에 따르고 그 권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것이다.

3) 대단결의 원칙에 따른다.

노동자의 힘의 근원은 단결에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기본원리다. 더 크게 단결하면 더 큰 힘이 나온다.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도 직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더 크게 단결해 왔다. 독일 금속노조는 4백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다시 섬유노조와 통합하는 등 독일을 비롯한 서구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신보수주의적 공세에 맞서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서 법과 제도, 정부 정책을 변경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단위 노조나 소규모 연맹이 전혀 무력하다는 것은 우리의 뼈저린 경험으로 알고 있다. 조직구성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화하는 것이 힘의 집중과 효율적 사용에 유리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발전은 대산업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소산업·업종·지역·단위사업장의 특수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히 역할이 배분·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 발전에서 간부의 지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간부의 역할이고, 이를 결정하고 완성하는 것은 대중이다. 간부의 합의로 조직발전은 출발하고, 투쟁과 사업의 성과로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직발전은 완성되는 것이다.

4) 조직적 투쟁적 중심을 올바르게 세운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이다. 정책적·정치적 능력도 조직·투쟁력으로부터 나온다. 조직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적·투쟁적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조직 발전은 조직·투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이미 형성된 투쟁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합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편의적 방식으로 합법화를 추구하거나 합법화를 위하여 조직·투쟁력을 희생시킨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조직·투쟁력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세력으로서 스스로 나서고 투쟁을 통해서 합법화를 쟁취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발전은 자체의 조직적 투쟁적 중심을 확고히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5)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한다.

오랜 세월 한국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지배 통제구조로서 역할 해 왔다. 지금도 한국노총은 연 7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정보조로 지탱되고 있다. 철도·자동차·택시·항운 등 대부분의 노총소속 연맹들은, 자본으로부터 분배받는 조합원 대중에 대한 인사권, 수취와 매수, 비민주적 삼중간선제 등으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조합원을 수탈하면서 어용노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통일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이 확보되고 내적 민주성이 확립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한국노총과의 연대 또한 연대를 통한 정권과 자본에 대한 전선의 확대 강화가 가능할 경우, 그리고 소속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인 연대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비판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공노대의 조직발전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 질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조직적 투쟁적 중심의 건설, 대산별연맹의 건설, 산별노조로의 발전, 정치세력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자주적 민주적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KLSI**